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2021 공동 국정감사

# 플랫폼경제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방안

2021. 08. 12.

발제 : 구 재 이 박사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

## 차 례

I. 플랫폼경제 .....	1
1. 플랫폼경제의 개념과 범위 / 1	
2. 플랫폼경제 생태계/ 4	
3. 플랫폼경제에 대한 규제 / 7	
4. 플랫폼경제 관련 국제적 동향 / 13	
II. 플랫폼경제의 문제점 .....	15
1. 플랫폼사업자의 정보와 수익 독점 / 15	
2. 플랫폼사업자의 사업영역과 규제 / 17	
3. 플랫폼노동자의 권익보호 / 18	
4. 플랫폼가입자의 권익보호 / 21	
5. 플랫폼이용자의 권익보호 / 24	
III.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방안 .....	25
1. 플랫폼경제에 대한 효과적 정책수단 확보 / 25	
2. 플랫폼경제 독점규제 강화 / 25	
3. 플랫폼경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 28	
4. 플랫폼노동자의 지위 및 부담 개선 / 30	
5. 플랫폼경제 데이터정책과 프로토콜경제 구축 / 35	
6. 플랫폼기업의 초과수익에 대한 추가과세 / 36	

\* 첨부자료 (#1~4)

# I. 플랫폼경제

## 1 플랫폼경제의 개념과 범위

- **(온라인플랫폼의 성장과 플랫폼경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과 공유경제가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데이터와 매칭알고리즘을 활용해 시장 양편에 있는 행위자를 중개하는 사업모델의 플랫폼기업이 출현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택트 문화가 확산에 따라 플랫폼경제 규모가 급격히 확장하면서<sup>1)</sup> 기존 산업구조를 빠르게 대체

\* 온라인 플랫폼(Online Platform): 다양한 사람들이 온라인 공간에 모여서 수요와 공급을 이루면서 그 안에서 새 환경을 계속 만들어가고 수익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시·공간적 제약없는 디지털 네트워크를 갖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의 시스템을 개방하여 개인·기업 등 다양한 그룹이 참여해 서로 원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고 참여자에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하는 경제시스템

-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형태)** 온라인 플랫폼사업의 범위는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배달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형태를 포괄하는데 기본적인 사업형태는 온라인플랫폼 기반으로 한 중개를 주업으로 하면서 유통, 배송 등도 직접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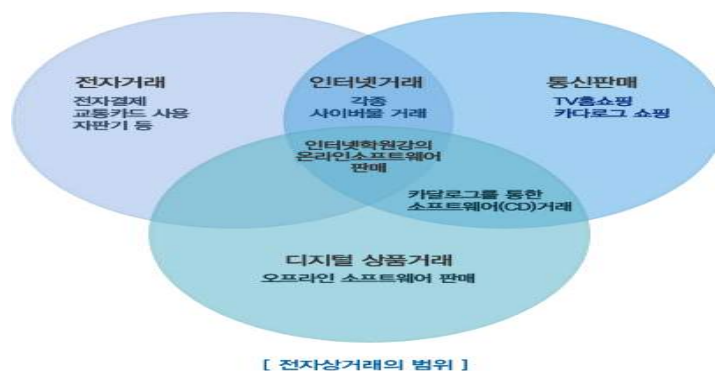
### 온라인 플랫폼경제의 형태

플랫폼 분야	개념과 범위	예시/플랫폼수입
전자상거래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NAVER쇼핑, 카카

1) 세계경제포럼(WEF)은 2021년 기준 세계 10대기업 중 플랫폼기업이 6군데에 달하고, 2025년 플랫폼경제 규모(플랫폼 매출액)가 약 6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협의) (온라인쇼핑몰)	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하는 상행위(商行爲). • 상품기획자가 상품의 전체 유통과정 대부분을 책임	오, 쿠팡 : 판매수입
통신판매중개 (오픈마켓)	• 다수의 개인판매자들이 인터넷에 직접 상품을 올려 판매할 수 있도록 공간 (market place) 제공 • 개별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직거래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조정역할, 거래알선, 중개시 청약접수, 대금결제 등이 사이버몰에서 진행	지마켓, 11번가 등 사이버몰 : 중개수수료(입점비+수수료), 광고료수입, 판매책임 없음
통신판매 (소셜커머스)	• 우편·전기통신, SNS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일정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포함)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나 용역을 판매	TV홈쇼핑, 인터넷게임, 유료 동영상강의(학원): 판매수수료, 판매자가 광고수입, 판매책임
음식 배달앱	• 온라인 배달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가입자(판매자)에게 소비자에게 음식판매를 중개, 광고 및 배송대행을 제공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온라인플랫폼 중개수입, 광고수입, 배달대행수입

\*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비교는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 전자상거래는 관련법령에서 협의로 '전자거래'를 의미하지만 통상적으로 통신판매를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출처: 국회 정무위 법률안 검토보고서)

## ○ (기존 경제구조와 플랫폼경제의 관계) 플랫폼경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핵심인프라와 생태계를 갖추고 이를 활용하게 하는 디지털경제\*의 한 분야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기제가 되기도 하지만 많은 부문에서 기존 산업구조를 빠르게 대체함으로써 플랫폼경제의 독과점화<sup>2)</sup>, 플랫폼참여자 보상 부족, 초단기근로자(Gig worker) 양산 등 많은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야기

\*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 기존의 시·공간에 제약된 산업경제체제를 뛰어넘어 인터넷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제품개발을 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하는 경제활동으로,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검색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며, 플랫폼경제·데이터경제도 포괄된다.

- **(판매자와 소비자의 온라인플랫폼 의존 심화)**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판매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이 전 산업분야에 확산되어, 판매업자와 소비자의 온라인플랫폼 거래의 존도가 갈수록 커져 향후 플랫폼 종속적 경제구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2020년기준 온라인쇼핑 시장규모 161조원으로 6배 증가, 소상공인 매출비중 오픈마켓 45.6%, 배달앱 56.6%)<sup>3)</sup>

2) 2020.10.06. 미 하원 사법위원회 반독점·상법·행정법 소위원회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16개월간의 조사와 관련된 보고서 및 권고안(Majority Staff Report and Recommendation)을 발표하였다. 2020년 9월 현재 구글 등 플랫폼들의 시가총액은 5조 달러 이상으로 S&P 100 가치의 3분의 1이 넘고, 지난 10년 동안 디지털 경제는 고도로 집중되어 독점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소셜네트워킹, 온라인검색, 온라인광고 등의 시장은 1~2개 기업이 지배하고 있고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플랫폼기업은 주요 유통채널을 통제하고 게이트키퍼 역할을 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전 세계 경제 총 생산량의 30%가 이들 기업 등 몇몇 소수기업에 속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 2020년 기준 오픈마켓 입점업체는 월평균 매출액의 45.6%를, 배달앱 입점업체는 월평균 매출액의 56.6%를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픈마켓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월평균 매출액 비율이 2018년 41.4%, 2019년 41.6%, 2020년 45.6%로, 배달앱의 경우 2018년 48.6%, 2019년 53.2%, 2020년 56.6%로 매

## 온라인쇼핑 거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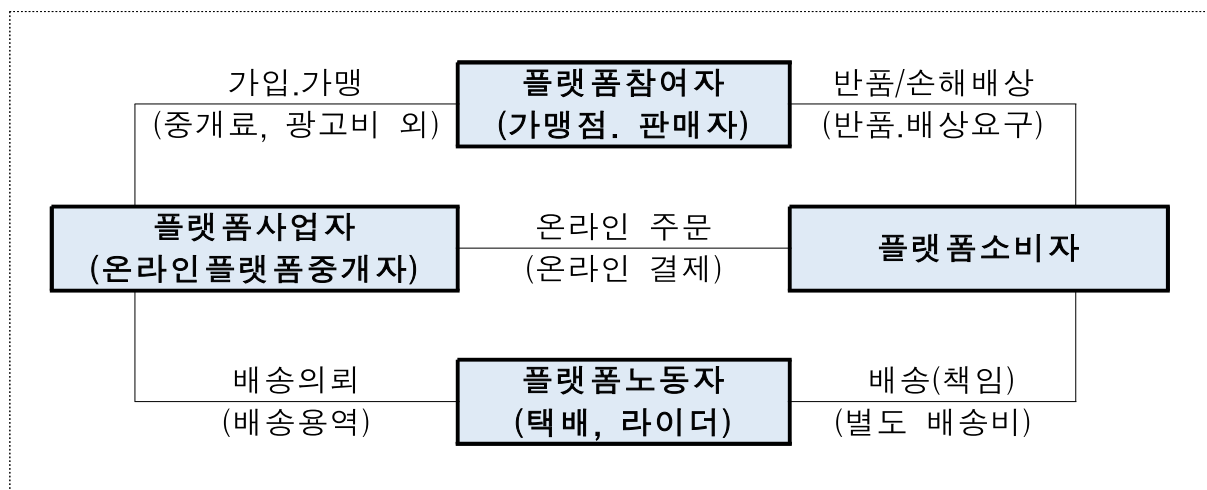
연도별		2010	2015	2019	2020
총 거래액(원)		25조2030억	53조8890억	135조2640억	161조1230억
규모 변동	주기	-	5년	4년	1년
	‘10년 기준 증가율(%)	-	2.13배	5.37배	

( \* 자료 :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국회 정무위원회)

-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과 플랫폼경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과 공유경제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속화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디지털데이터와 매칭알고리즘으로 시장의 양편에 있는 행위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플랫폼경제 규모가 대폭 확대

## 2 플랫폼경제 생태계

### 플랫폼경제 생태계



출액의 과반이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 의존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매출비중의 증가(2020년 기준 전년 대비 오픈마켓 4%p, 배달앱 3.4%p)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소비 비중이 대폭 증가한 것을 반영한다(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2021.04.01.).

## 2-1 플랫폼노동자

- **(플랫폼노동자의 개념)** 앱이나 SNS 등 디지털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고용형태의 노동자, 플랫폼기업이 외형상 통제력 없이 노동선택권을 주되, 선택한 경우엔 규율 준수, 업무수행결과를 고객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조달

\* 디지털특고, 크라우드워커(crowd worker), 사이버노동자, 유비쿼터스(ubiquitous) 노동자 등 별칭

- **(플랫폼노동자의 분류)**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배달대행, 대리운전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다양한 직업군을 포괄

\* 플랫폼노동자의 주요 업종: 대리운전, 화물운송, 택시운전, 음식배달, 퀵서비스, 청소, 건물관리, 음식점보조, 서빙, 가사육아도우미, 요양의료, 통번역, 사무지원, 판매, 영업 등

- **(플랫폼노동자의 규모)** 2020년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얻은 종사자는 약 179만 명(15~64세 취업자의 7.4%)으로, 배달앱 기사(라이더)수만 22만3000명(한국노동연구원 조사)

- **(플랫폼노동자의 지위)** 플랫폼노동자는 특고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으로 공식적으로 근로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산재 등 노동법에 대한 개별 판례상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 세무상 플랫폼노동자는 플랫폼사업자와의 계약과 세무처리·보고(3.3%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로 보고되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를 하는 등 ‘사업자’로 취급

\* 플랫폼노동자의 ‘사업성’과 관련하여 종소세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그 ‘사업영역’은 대부분 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일부로만 분류되고,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라도 강제하지 않는 등 세법상 사업자로서의 명확한 지위를 확인하고 있지 않음.

### 플랫폼노동자의 사업소득 분류와 추계소득

업종	업종코드	일반율	초과율	기준경비율
기타자영업	940909	64.1	49.7	17.3
대리운전	940913	73.7	63.2	21.4
퀵서비스	940918	79.4	71.2	30.4
기타물품운반	940919	68.3	55.6	20.3
음료품배달	940907	80	72	29.1

### ○ (플랫폼노동자 지위에 대한 국제동향) 플랫폼노동자를 ‘독립계약자’로 노동법·행정상 ‘사업자’ (프리랜서) 아닌 ‘노동자’ 취급

구분	내용	지위
미국(캘리포니아주)	2019.09.18. 캘리포니아 주상원에서 ‘독립계약자’ 사용기업을 대상 독립계약자를 노동자로 분류하도록 강제하는 AB.5법(Assembly Bill No.5) 통과, 2020. 01.01.부터 시행	우버(Uber), 리프트(Lyft) 등의 플랫폼사업자와 독립계약자가 주된 대상으로, 노동자로 분류된 독립계약자들은 최저임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등 보장
프랑스	2016년 ‘노동과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직업적 경로의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법제화	플랫폼노동자의 정의, 다양한 권리 제공, 사고 플랫폼사업자에게 산재보험, 직업교육 제공, 노동조합 결성권 부여
스페인	2019.07. 마드리드 법원은 딜리버루(Deliveroo)배달라이더들이 프리랜서 아닌 직원으로 인정 판결	마드리드 딜리버루의 플랫폼노동자가 독립계약자로 자율성 부족, 회사지시 받아 프리랜서로 볼 수 없으므로 플랫폼사업자와 노동자는 직접 근로계약 체결과 그에 따른 혜택 부여
덴마크	2018년 덴마크 가사노동서비스 플랫폼기업 힐퍼(Hilff)와 노조(3F)가 체결한 단체협약(플랫폼노동자가 근로자-프리랜서 선택권)	플랫폼노동자가 플랫폼을 통해 100시간 노무제공을 하면 자동적으로 근로자 지위 획득하고, 단체협약 적용(프리랜서를 희망하는 사람은 100시간 되기 전에 힐퍼에 통지하면 근로자의 지위 포기)
이탈리아(라치오주)	2018년 이탈리아 라치오 주 정부는 ‘긱 경제(Gig economy)에서의 기본권 선언’을 작성,	배달노동자는 물론 앱을 통해 대중에게 서비스 제공 플랫폼노동자 일반을 대상, 플랫폼사업자-노동자 등록 ‘디지털노동포털(portale del



	플랫폼노동의 임금, 산업안전, 사회보장에 대한 공청회 후 2019.05. 최초의 플랫폼 노동자보호법안으로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lavoro digitale) 설치, 업무관련 재해-질병 발생 시 노동자 보호, 안전교육 강화, 책임보험-운송수단 유지비용 지불(플랫폼사업자 부담), 모성 보호 및 사회보장제 적용(사업자 부담), 개수당 보상(piecework compensation) 폐지, 노동제공 불발시 예약배상금(reservation indemnity) 부과, 단체협상으로 기본급-성과급 산정
이탈리아(볼로냐시)	2018. 05. '도시의 디지털노동권의 기본원칙에 관한 헌장' 발표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시급 지급, 시간 외 수당 · 휴일근로수당 · 기후수당 지급, 산재보험 제공, 이동수단 유지 비용 지급, 결사의 자유와 파업권 보장
네덜란드	2019.01. 네덜란드법원은 딜리버루 배달노동자 지위를 개인사업자 아닌 종업원으로 간주해 단체협약으로 보호대상 판결	딜리버루와 노동자간 계약과 업무수행이 노동자들의 업무시간을 제약, 개별협상 없이 동일 조건으로 구성된 표준계약을 활용해 플랫폼 노동자의 협상여지 부족
영국	'테일러보고서'(Taylor Review): 고용 · 노동 법제현대화에 종합적 · 장기적 정책대안 마련	고용인(employee), 노무제공자(worker), 자영업자(self-employed)로 구분하는 삼분법을 새로운 경제 환경에 부합하도록 '종속적 자영자'로서 단순한 자영업자와 다른 특별보호조치 필요
	굿워크플랜(Good Work Plan): 테일러보고서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미래 노동정책 비전을 담은 전략보고서(2018.12.)	플랫폼노동자의 고용상 지위를 명확화, 세금과 권리의 불일치 축소, 자영업자로서의 전제불인정, 고용관계 존재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 플랫폼노동자의 권리를 플랫폼사업자가 서면 명시, 플랫폼노동자들에게 제공의무, 플랫폼의 평판기록(reputational history)을 통합관리 권고
	(영국 우버운전자 판결) 영국 우버 대상 최저임금과 휴일급여의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의 항소심 판결(2018.12.)	플랫폼사업자 우버는 최저임금과 휴일급여 등 플랫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 독립계약자로 분류한 것은 잘못, 노무제공자 직위로 분류해야 적절하다고 판결

### 3 플랫폼경제에 대한 규제

- **(전기통신사업자로서 플랫폼경제)**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는 본질적으로 '중개업' 이지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

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에 해당하는 바, 해당 법률이 ‘기간통신사업자’ 위주의 규제체계로 온라인플랫폼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근거와 금지행위 등 규제가 대부분 부적절하거나 미흡하여 플랫폼을 둘러싼 다면적 거래관계 등 사업실질을 반영한 규제는 되지 못하고 있음<sup>4)</sup>

-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규제)** 전통적인 유통산업을 중심으로 독점규제 등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경우 ‘유사유통업’의 성질을 가짐에도 현행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입법\*의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규제대상으로 삼지 못하고 있음.

\* 유통시장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현행 법률로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나, 주로 상품 등 소매업거래, 임대차관계 등의 ‘오프라인 유통업 중심’으로 적용되고 온라인거래는 포괄하지 못해 플랫폼경제에서의 독점방지 및 공정거래와 소비자 등 약자 보호에 허점

법률	목적 및 주요내용	주요 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①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②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 ③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창의적인 기업활동 보장,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기업결합 제한 및 경제력 집중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불공정행위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한, 공정거래 감독 전담기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4)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사업’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관할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해야 한다.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신고의무가 있다. 이는 통신망에서 트래픽을 일으켜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한 규제를 위한 것이나 변화된 산업구조를 반영하지 못해 사업상 규제가 되지 못하고 외형적으로만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의 설립 및 분쟁조정, 조사등의 절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손해배상, 적용제외 대상, 보칙, 벌칙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②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 →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 분쟁의 조정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벌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의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소비자권익 보호, 시장신뢰도 제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의무, 소비자권익의 보호, 위반행위 조사 및 감독,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보칙, 벌칙

\* (첨부자료 #1) 유통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관련 현행입법

**(온라인플랫폼경제와 공정거래 · 소비자보호 규제)** 플랫폼경제가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자본과 정보가 특정 플랫폼기업에 집중되고 있음에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외에 온라인 플랫폼기업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적 통제와 규제를 위한 법적 장치가 거의 없는 실정

온라인 플랫폼사업	규율 법령		플랫폼사업자 (사례)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인터넷쇼핑 (오픈마켓)	(규율법률 없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NAVER쇼핑, 카카오, 쿠팡
통신판매	(규율법률 없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TV홈쇼핑, 인터넷게임, 동유료 영상강의(학원)
음식 배달앱	(규율법률 없음)	(규율법률 없음)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 **(21대 국회 플랫폼경제 관련 법안)** 21대 국회들어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서 공정거래를 통해 소상공인 · 중소기업들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지속적으로 제출

법안	취지	주요내용
온라인 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안 (‘20.07.13.송갑석 의원등 10인)	①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 방지와 통신판매중개에서 판매업자를 보호, ②온라인플랫폼 운영의 투명성 제고, ③공정한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 중개거래 질서 확립→ 온라인판매 중개업자와 온라인판매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 균형발전	①검색·배열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등을 공개, 주요원칙 등을 준수 의무, ②온라인중개계약 체결 시 온라인판매업자에게 서면계약서 제공, ③수수료부과기준에 따르거나 판매촉진행사 실시할 때 온라인판매업자를 차별행위 등 금지, ④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범위반사실 조사권, ⑤법 위반한 온라인판매중개업자 등에 시정명령, 과징금·과태료 부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20.12.11, 전해숙의원등 12인)	①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②이용자의 권익을 보호→ 정보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① 대규모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정의와 강화된 의무 및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대상 ②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이용자 불만 접수채널 확보, 내부불만처리지침 마련 의무 ③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한·중단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사전에 내용 및 사유 통지 의무 ④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이용자가 온라인플랫폼을 이용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자기영업 활동에 부당이용 또는 제3자 부당이용 금지 ⑤ 대규모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콘텐츠등 노출방식 및 순서 결정기준 공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2인, 2021.1.25)	①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②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 및 분쟁당사자 간의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온라	①적용대상 플랫폼 사업자: 매출액 또는 중개거래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 ②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③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검색·배열순위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을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의무 ④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중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시 사전통지의무 ⑤불공정거래행위 및 금지행위의 유형을 열거 ⑥표준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계약서를 마련 ⑦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인 플랫폼 분야에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권, 실태조사권,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⑨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 동의의결제도 도입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10, 2021.01.27)	①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절차규정, 금지행위 규정 및 분쟁예방 및 해결 제도적 장치 마련 ②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권리구제의 편의와 신속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지사에게 감독·분쟁조정권 부여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중개거래 계약서의 서면 발급의무를 부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표준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 ②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중개계약 약관 등록, 약관 등록취소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명단 공개 ③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단체구성권 부여, 사업자단체에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부여 ④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이용사업자 중개계약내용 변경 및 중개서비스 제한 등 사전통지 의무 부여 ⑤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금지 ⑥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 신고,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조사 협조 등이유로 불이익행위 금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2021.01.28.)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등 규정 →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①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등 ②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사전통지 의무 ③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 ④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조사 및 처리 ⑥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⑦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에 관한 법률안(배진교의원 등 10인, 2021.03.08)	①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절차규정을 마련 ②분쟁의 예방 및 분쟁당사자 간의 원활한 분쟁 해결에 대한 제도적 장치 등 규정 →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① 법률의 적용범위: 중개매출액 1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상 금액 이상인 자와 판매가액이 1천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정한 금액 이상인 자 ②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중개거래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③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중개거래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 이전 계약보다 불이익변경금지 ④‘불공정거래행위’ 규정
온라인 플랫폼	①온라인 플랫폼 중개서	①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 계약서 교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 2021.03.15.)	비스 이용과 관련한 계약서 교부의무 명확화 ②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등 규정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중개서비스 이용거래 질서의 제도적 기반 마련	부의무 등 ②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사전통지 의무 ③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 ④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조사 및 처리 ⑥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⑦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장철민의원 등 20인, 2021.03.18.)	①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 플랫폼종사자는 노동관계법을 우선적용해 보호, ②플랫폼종사자의 기본권보호 및 공정계약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항을 규율 → 플랫폼종사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발전 이바지	①플랫폼 종사자가 「근로기준법」 등의 근로자해당시 해당 법률을 우선적용하되, 이법이 유리한 경우 이 법을 적용 ②플랫폼 종사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자 등에 해당시 해당 법률을 이 법에 우선적용하되, 이법이 유리한 경우 이 법을 적용 ③온라인플랫폼 이용계약 및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④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⑤정부의 책무 및 과태료 부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2021.04.20.)	①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②이용사업자들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 부여, ③신속한 고충처리와 분쟁조정절차, 피해구제를 위한 단체소송 제도 등을 도입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	①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와 사업자는 각자의 거래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 ②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사업자와 체결하는 중개계약에 필요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 ③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중개서비스 공급을 제한, 중단, 해지하는 경우 그 내용과 이유를 사전에 통지 ④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 중개서비스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 ⑤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사업자들이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협의요청할 수 있는 교섭 요청권 부여 ⑥이용사업자가 이용사업자 단체를 구성·가입·활동하거나 교섭 요청을 한 것을 이유로 한 보복행위 등 금지 ⑦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와 사업자 간에 분쟁 조정 규정 ⑧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조사, 시정명령, 시정권고, 동의의결,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적 제재조치 ⑨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⑩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단체소송 제기 가능

\* (첨부자료 #4) 21대 국회 플랫폼경제 관련 법안(법안별 취지 및 주요내용)

## 4 플랫폼경제 관련 국제적 동향

- **(미국의 플랫폼기업에 대한 독점규제)** 미국의 경우 2020년 미 하원의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빅테크 플랫폼기업에 대한 조사 및 권고 이후 플랫폼경제에 대하여 독점금지,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 등 규제입법안이 확대\*

\* (미국) 플랫폼 독점 규제 등을 위한 4 법안(2021.06. 하원) : ①온라인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American Choice and Innovation Online Act), ②플랫폼의 경쟁 및 기회에 관한 법률(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③플랫폼 독점 종식에 관한 법률(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④ 경쟁 및 호환 촉진을 위한 서비스 전환 지원 법률(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 ACCESS Act)

- **(EU의 대규모 플랫폼사업자 규제)** EU 집행위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후규제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경쟁제한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전규제를 강화하고자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

\* 연매출, 이용자 수 등 일정요건 갖춘 대형 온라인플랫폼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하여 의무부과 등 규제대상으로 규율

- **주요내용** : ① **게이트키퍼의 의무**: 개인정보 결합, 독점계약 불가, 개별홍보 허용, 특정서비스 강요금지, 플랫폼경비 제공, 개인정보의 경쟁목적 사용금지, 소비자의 앱 선택권 부여, 자사 우선노출 등 우대금지, 운영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 허용, 광고효과 검증허용, 소비자의 데이터 접근권 허용, 검색엔진의 비차별적 데이터 접근 허용,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조건의 허용 등

② **강제수단** : 의무 불이행 시 전세계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 게이트키퍼에 대한 18개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5년간 3차례 이상)시, 특정 사업 매각 등에 관한 시정조치,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집행위가 직접 DMA 집행권과 시장조사 권한을 행사



\* (첨부자료 #2) EU의 「디지털시장법」(DMA) 주요 내용

\* (첨부자료 #3)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주요 내용

○ **(EU 공정성과 투명성 증진을 위한 플랫폼중개규칙 제정)** 2019년 유럽연합(EU)는 온라인 중개를 하는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거래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온라인 중개 서비스 비즈니스 사용자를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 증진에 관한 규칙」\* 제정, 2020년 7월부터 시행

- **적용대상** : 앱스토어, 가격비교사이트, SNS, 검색엔진 등 모든 플랫폼 기반 상거래를 포괄해 해당 규칙의 규율대상
- **주요내용** : ❶ **거래공정화 방안** : 판매업체의 상품 공급제한·유보·중단 및 약관 변경시 사전고지, ❷ **투명성 강화방안**: 검색결과 노출순위 결정 알고리즘 주요 매개변수 공개, ❸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 방안**: 조정절차의 지원 및 단체소송제의 도입 등



## II. 플랫폼경제의 문제점

### 1 플랫폼사업자의 정보와 수익 독점

- **(수익귀속과 책임부담의 권형간 불형평)**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 및 소비행위에서 가장 큰 수익은 플랫폼사업자에게 귀속되고,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 및 음식물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음식자영업자 등 플랫폼가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등 수익귀속과 책임 부담간 불균형

\* 2020년 기준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는 월평균 최대 매출액의 12.5%이고, 배달앱은 중개수수료가 최대 16%에 달했으며 추가로 정액(소상공인의 87.6%가 활용) 또는 정률(소상공인의 41.2%가 활용) 광고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 오픈마켓은 상품노출 기회 만족도(5점 평균 점수 기준 3.67점, 만족 비율 69.0%)에 비해 판매수수료(3.20점, 36.8%)와 광고비(3.17점, 35.6%)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배달앱은 응답업체의 63.2%가 배달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수준이 과도(매우과도 20.0 + 과도 43.2)하다고 답했다(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2021.04)

- **(플랫폼기업의 ‘시장지배력’과 정보독점으로 인한 영향)**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은 독과점과 불공정행위 등 해당 부문의 사업상 폐해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독점과 경제적 과급력으로 언론, 혁신, 프라이버시, 정치적 위상 등에서 엄청난 사회적 영향을 미침

- 디지털시장에서 온라인플랫폼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언론 · 혁신 · 프라이버시 · 데이터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미 하원 사법위원회 반독점·상법·행정법 소위원회, 디지털시장 경쟁에 관한 보고서 및 권고안(Majority Staff Report and Recommendation), 2020.10.06.]

❶ 언론과 민주주의: 온라인 플랫폼의 지배력으로 인해 민주주의에 필수적

인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출처가 감소하였음을 보여주는 증언과 자료를 제출되었다. 여러 자료들에서 신뢰도 높은 뉴스원 제작 및 이용가능성에 대해 지배력이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지배적인 플랫폼과 언론기관 간 '협상력 불균형이 상당하고 증가하고 있다'는데 우려를 표명했다. 일부는 주요 플랫폼, 특히 구글과 페이스북에 대해 '점점 더 의존'하고있다고 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신뢰할 수 있는 뉴스원의 배포와 수익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양질의 저널리즘 출처의 품질과 이용 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COVID-19 대유행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및 국가 시장 모두에서 활기찬 자유언론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②혁신과 기업가정신:** 온라인 부문 시장지배력의 강화는 미국 경제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실질적으로 약화시켰다. 예를 들어, 일부 벤처 투자자들은 단순히 투자자가 신규진입자를 가치있는 투자로 보지않기 때문에 지배적 플랫폼을 경쟁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혁신'kill zone'이 있다고 본다. 또 다른 투자자들은 디지털 경제에서 지배적인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경쟁하는 기업가 및 기타 기업에 편당하는 것을 피한다고 답했다. 한 저명한 벤처 투자자는 소위원회 실무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이유로 기업들이 Big Tech 등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와의 경쟁을 회피하려는 강력한 경제적 유인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③프라이버시 :** 적절한 프라이버시 보호막이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 데이터의 지속적인 수집 및 오용은 온라인시장 지배력의 지표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금전적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제품은 '무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의 관심이나 데이터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진정한 경쟁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지배적인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적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공하며 서비스 품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하되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프라이버시 보호가 취약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해당 서비스 이용을 포기해야 한다.

**④ 데이터 집중 :** 지배적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은 정치적·경제적 자유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소위원회 실무자들은 지배적인 플랫폼에 의존하는 시장참여자들 사이에서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음을 목도하였다. 많은 이들이 사업의 성공과 경제적 생계가 플랫폼의 막대하고 자의적인 힘에 달려 있다는 점에 불안감을 드러냈다. 또한, 법원과 규제기관들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법률과 법원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기업들이 법을 초월하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법 위반을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⑤ 정치적 영향력 :**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의 강화는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영향력의 증가와 맞물려 있다. 직접적인 로비, 싱크탱크 및 학계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의 결합을 통해 구체적인 규제방안 수립에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 2 플랫폼사업자의 사업영역과 규제

- **(플랫폼기업의 사업영역과 규제대상)**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업종은 도·소매 유통업이나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중개업’ (서비스매출)으로 분류되고 있어 유통업 등 현행 법령의 규제대상에 서 제외

\* 대표적 온라인 플랫폼기업 ‘배달의민족’(법인명: 우아한형제들)의 업종과 사업영역 검토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사업자등록),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유통 및 서비스 등 목적사업(법인등기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공급, 광고플랫폼 제작 및 정보서비스업(자본시장 공시, 감사보고서상 주요사업)

(단위: 천원)

구 분	2020사업연도	2019사업연도
서비스매출(배달대행, 중개)	859,796,889	498,925,388
상품매출	217,306,421	50,725,743
기타매출	17,673,826	9,644,858
제품매출	382,908	1,837,445
합 계	1,095,160,044	561,133,434

\* 배달라이더 외주비 지출(100%출자 배달대행업 회사 외주형태) : (주)우아한청년들(배달대행업) 279,064,639천원

### ○ ‘우아한형제들’ 감사보고서(2020사업연도 삼정회계법인) 상 재무제표 주석 중

#### (19)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된 대가를 기초로 측정됩니다.

##### ① 수행의무 식별 및 수익인식 시점

당사는 **광고플랫폼 및 정보서비스 제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광고 서비스 제공 계약 등에서 **㉠광고서비스, ㉡결제대행, ㉢주문중개, ㉣배달대행** 등과 같이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당사의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결제대행의 경우, 고객의 결제승인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수행의무가 이행 완료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광고서비스의 경우,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주문중개의 경우, 고객의 배달앱 주문이 POS기기에 전송이 이루어지는 시**

점에 수행의무가 이행 완료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배달대행의 경우 해당업무가 처리됨과 동시에 고객이 실질적으로 효익을 얻어 소비하고 있는 형태이며, 회사에 의하여 운송의 진척이 증가할수록 고객이 향유하는 효익도 비례적으로 증가합니다. 회사가 운송 중 특정 시점 이후의 운송을 다른 기업에 이전할 경우 회사가 기존에 수행한 이전 시점까지의 운송을 다시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한편,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정도가 고객에 주는 가치에 상응하는 만큼의 부분에 한하여 청구 가능한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청구권만큼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상품 판매로 인한 수익은 고객에게 상품이 인도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 ②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당사는 고객에게 할인쿠폰 및 포인트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이 당사에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함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대가는 거래가격에서 차감하여 인식합니다.

## 3 플랫폼노동자의 권익 보호

- **(플랫폼경제와 플랫폼노동의 특성)** 플랫폼경제는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를 이용하지 않고 인공지능(AI)나 빅데이터에 의한 고도의 알고리즘을 활용, 시장의 양편에 있는 행위자를 중개하고 부분적으로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성격으로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 ‘초단기적 노동력’을 활용하는 사업모델임.
- **(온라인플랫폼과 플랫폼노동자의 법적 지위)** 배달앱 온라인플랫폼은 다수의 공급자와 소비자에게 배달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거래행위를 촉진하는 ‘중개업’의 일종으로 통상적인 유통업과는 다르고, ‘배달노동종사자’(플랫폼노동자)는 배달앱 온라인플랫폼을 매개로 다양한 운송수단을 통해 배달 업무 또는 서비스를 수

행하는 자로 ‘사업자’ (인적용역) 로 분류

- **(플랫폼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체 노력)** 배달 플랫폼기업과 플랫폼노동종사자가 참여하는 초보적인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플랫폼경제 발전과 플랫폼 노동종사자 권익보장에 관한 협약서’ 도출, 개별 플랫폼기업과 협약 체결 진행

\* **플랫폼노동종사자 권익보장 등을 위한 업계 자율협약** : 플랫폼 기업, 노동계, 학계 전문가 등 플랫폼생태계 당사자들이 직접 주도하여 출범한 사회적 대화 협의 기구인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에서 음식배달산업을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 이슈를 논의하여 ‘플랫폼경제 발전과 플랫폼 노동종사자 권익보장에 관한 협약’을 마련하였다. 2020. 10. 배민(우아한형제들)이 체결한 협약내용에는, ▲플랫폼기업과 플랫폼노동종사자의 정의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안전을 위한 상호노력 ▲정보보호와 소통 등의 조항 등을 담았다. ▲기업과 종사자의 계약은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가 이해되도록 명료하게 작성하고, ▲플랫폼을 매개로 계약을 체결한 종사자가 스스로 원하는 시간에 업무를 수행할 권리를 갖도록 하고, ▲기업은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날짜나 시간을 지정하지 않으며, ▲종사자가 원하지 않는 업무의 수행을 강요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산재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적절한 교육과 보호장구를 제공하며, ▲빠른 배달을 압박하지 않고, 악천후나 감염병 위기 발효 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기업 의무도 명문화했다. 종사자는 ▲법률에 따라 정해진 안전 관련 의무교육은 물론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교육에도 성실히 임하도록 했다.

-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납세의무)** 배달앱 플랫폼노동자(라이더)의 경우 ‘종속계약자’에 해당하지만 플랫폼사업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로 인하여 세무상 ‘사업자’ (인적용역)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플랫폼노동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와는 달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음.

- **(플랫폼노동자의 세 부담)** 배달앱 플랫폼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자가 또는 자기리스한 이륜차(오토바이)를 가지고 유류대, 보험료 등을 부담하면서 플랫폼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음식배달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는 바, 이는 사실상 물류운송이므로 세무상 취급되는 ‘대리운전’ 이나 ‘퀵서비스’ 와 같은 인적용역과는 거리가 있음에도 부적정한 업종분류와 소득금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플랫폼노동자의 세 부담이 크게 높은 실정
- **(플랫폼노동자의 법적·행정적 취급)** 배달앱 플랫폼노동자(라이더)의 경우 이륜차를 이용하여 음식, 물건 등을 배달하는 업종으로, ❶ 업종코드상으로는 화물운수업 중 ‘늘찬배달업’ (이륜차운송업)과 유사하므로 이를 기준(단순경비율 86.5%)으로 소득률을 적용하면 소득금액과 세금은 현재보다 훨씬 낮아져야 정상이며, ❷ 향후 ‘라이더’ 업종코드를 신설하여 자기운송수단으로 운송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물류업의 일종인 ‘늘찬배달업’ 에 준하는 세부담이 가능하도록 업종코드를 새로 생성할 필요
-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청년 등 조세감면)** 배달앱 플랫폼노동자(라이더)는 세무상 사업자로서 ‘인적용역’ (개인서비스)로 분류되어 높은 소득률과 함께 청년창업 등 창업중소기업 감면이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청년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 일체의 비과세·감면 적용을 받지 못해 세 부담이 매우 높은 실정

## 4 플랫폼가입자에 대한 권익 보호

- **(온라인 플랫폼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네트워크 효과와 규모의 경제 등 온라인플랫폼산업의 특성상 시장집중효과로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가 확대된 시장영향력을 바탕으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확보, 불공정행위 및 피해 증가\*

\*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온라인플랫폼기업은 입점업체에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설정 및 변경, 판매가격 등 경영간섭행위, 불이익한 거래조건 설정 및 변경, 부가서비스 이용 강제와 같은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것으로 조사(한국법제연구원, '2019년 전자상거래 불공정거래행위 현황과 판매자인식 실태조사(판매자를 중심으로), 2019 ; 중기중앙회, 온라인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18).

### 오픈마켓에서의 불공정행위 경험

구분	사례 수	불공정행위 경험유무(%)	
		없음	있음
주거래 오픈마켓	308	77.3	22.7
전체 오픈마켓	308	58.1	41.9

(자료 : 온라인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18)

- **(플랫폼경제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거래의존도 심화로 온라인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되어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피해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존 정책 수단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위해 2021. 03.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 **(‘불공정행위 유형’의 구체적 입법)** 온라인 플랫폼경제에서 거래조



건 등에 있어서 온라인판매 중개업자가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플랫폼 판매업자가 피해와 부담을 지고 있으므로<sup>5)</sup> 「대규모유통업법」에서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유사하게 온라인플랫폼경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온라인판매 중개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미국, EU등의 입법례도 ‘불공정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

### 오픈마켓 불공정행위 유형<sup>6)</sup>

불공정행위	내용
①광고비등 비용·판매수수료 과다	오픈마켓은 판매자들에게 상품노출 기회를 높이기 위해 광고비(예: 유도광고)와 부가서비스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고, 판매자들은 오픈마켓의 광고비용 및 수수료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오픈마켓과 협상력의 차이로 대응하지 못함
②부당한 차별적 취급행위	오픈마켓이 판매자들에게 지원하는 할인쿠폰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불공정하게 제공,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판매자에게 수수료 차별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차별
③사업활동방해 행위	상품가격의 과도한 인하 강요, 타 오픈마켓 입점 방해, 퇴점 강요 또는 타 오픈마켓의 상품가격 인상을 강요하거나, 자사 거래건 우선배송 강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사업활동을 방해
④배타조건부거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게 강요하거나,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공급하도록 강요함
⑤부당한 거래거절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자 회원 가입을 거절하고 지속된 거래를 중단하거나 등록 상품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함
⑥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제의하거나 거래조건을 오인시켜 타 오픈마켓 또는 타 판매자의 고객을 당사 또는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함
⑦거래강제행위	판매활동을 조건으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또는 불이익을 제시하여 다른 상품 또는 해당 용역을 해당 오픈마켓 또는 해당 오픈마켓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요함
⑧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판매 목표를 강제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주거나 광고서비스 등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함
⑨지원 부조리	판매활동과 부관한 기부금, 협찬금을 요구하거나 기타 금품, 향응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

5)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입점업체의 37~41%(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2018), 온라인쇼핑몰 입점업체의 60.8%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한국법제연구원 실태조사, 2019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찬성했다 (중소기업중앙회, 2021.04.)



불공정행위	내 용
⑩ 일방적 정산 절차	오픈마켓-판매자 간 판매 후 수수료 등의 정산 시 세부내역(예: 카드수수료 등)에 대해 오픈마켓이 일정적으로 결정하고, 판매자는 정산 관련 세부내역을 전혀 알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통보받음
⑪ 귀책사유에 판매자 일방적 책임전가	소비자에게 판매 과정에서 오픈마켓의 과오나 오류 등이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판매자에게 전가하여 오픈마켓은 책임 회피
⑫ 직간접적 판매 대행으로 판매교란	오픈마켓이 직·간접적으로 제품을 구매하여 일방적으로 판매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가격 등 판매관련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판매 행위를 교란
⑬ 합의된 서면 계약 부재	오픈마켓-판매자 간 판매 조건(수수료 등) 등과 관련하여 합의된 서면 계약서(혹은 전자계약서) 없이 진행하여, 향후 오픈마켓-판매자 간 법적 분쟁 시 판매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장

- **(플랫폼경제의 독과점 문제)** 온라인 플랫폼경제의 특성상 독과점으로 인한 불공정과 과도한 이익추구는 소비자와 판매자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산업과 경제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 불공정 문제가 더욱 공고해질 우려 이로 인해 일방적인 수수료 변경, 광고비 떠넘기기, 고객정보 독점, 독점한 고객정보를 활용한 업종 확대, 검색 및 노출 알고리즘 조작, 수수료 폭리 등 불공정이 심각한 문제

\* 온라인쇼핑 플랫폼시장의 70%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 네이버쇼핑이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해 온라인 검색순위를 조작해 G마켓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순위를 하락시키고 자사제품을 상단에 노출하는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로 267억원의 과징금처분(2020.10.)

- **(온라인플랫폼기업의 데이터 독점)** 일방적인 수수료 변경제한, 고객정보 독점 규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검색 및 노출 알고리즘 투명한 공개 등 온라인플랫폼의 기본질서와 생성된 정보의 제공 및 공공관리 방안과 입법이 시급

6) 중소기업연구원, “오픈마켓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및 공정거래 법제화방안 연구”, 중소기업중앙회, 2014.12.

## 5 플랫폼이용자의 권익 보호

- **(온라인플랫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리보장과 피해예방을 위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이 필요
- **(이용자 권리로서 데이터이동성 보장)** 이용자는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이용·활용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서 데이터전송요구권을 가지며, 개인정보도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넘어 자유롭게 제공된 정보를 수시로 삭제 및 거부할 수 있도록 할 필요<sup>7)</sup>

\* EU 집행위원회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은 사업이용자와 최종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규칙(GDPR)과 별도로 이용자의 선택 및 요청에 의한 ‘데이터 이동성’을 규정

### ○ EU 「디지털시장법」(DMA) 제6조(게이트키퍼의 추가의무)

- ⑧ 개인정보보호규칙(GDPR)에 따라 최종이용자에게 데이터 이동성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 ⑨ 개인정보보호규칙에 따라 최종이용자가 그러한 공유를 선택한 경우에만 접근·이용을 제공해야 한다.

7) 2020년 9월 24일 미국 ‘Consumer Reports’(CR)는, “플랫폼 인식: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 및 공정성에 대한 소비자 태도”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의 85%는 온라인 플랫폼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에 대해 매우 우려하거나 다소 우려하고 있으며, 81%는 플랫폼이 보다 포괄적인 소비자 프로필을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의 수집, 보유에 우려한다.”며, “미국인의 60%는 이용자가 중요한 데이터나 연결을 손실하지 않고 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상호운용성 기능 의무화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더 많은 정부규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 Ⅲ.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방안

#### 1 플랫폼경제에 대한 효과적 정책수단 확보

- **(데이터기반 플랫폼기업의 규제방안)** 플랫폼경제의 기초인 플랫폼 사업은 서로 다른 이용자 집단을 끌어 모으고 이들 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교류를 지원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플랫폼경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는 ‘데이터’ 관리에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규제대책을 마련
- **(플랫폼 위험요소를 점검하는 정책수단 마련)** 플랫폼기업에 대한 이익의 편중,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경제권력화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은, 네트워크시대 새롭게 등장할 위험요인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적 설계 필요하며, 여기에는 플랫폼기업과 인접 산업을 분리하는 정책, 플랫폼기업의 인공지능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정부 감사기능을 확보, 플랫폼기업 경영권의 집중을 막고 최대한 분산대상이 되도록 하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

#### 2 플랫폼경제 독점규제 강화

- **(플랫폼경제에서의 독점규제의 중요성)** 온라인플랫폼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므로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경우 판매자와 소비자에 대

한 피해는 물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경제권력화될 수 있으므로, 디지털경제에서 경쟁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반독점 규제 필요

- \* 미국의 반독점법과 플랫폼기업에 대한 강력한 적용 : 기업들이 담합이나 제휴 등으로 해당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거나 경쟁을 저하시키는 경우 셔먼법, 클레이튼법 등 독점금지법을 적용, 강력 제한하고 있으며, 최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플랫폼기업들에 독점금지법의 강력한 적용을 권고, 입법안 제출

**“경쟁보고서 및 권고안”(Majority Staff Report and Recommendation), 미 하원 사법위원회 반독점상법행정법 소위원회, 2020.10.06.**

- **취지와 내용** :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16개월간의 조사결과 보고서와 함께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및 애플의 시장지배력과 사업 관행이 경제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디지털경제에서의 ‘경쟁’ 회복, 「독점금지법」 강화, 「독점금지법」 집행 부활 등 다양한 권고를 포함하고 있다.

- **권고사항(recommendations)**

- ①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회복** : 특정 지배적 플랫폼의 구조적 분할 및 인접 사업부 운영 금지, 지배적 플랫폼의 자기서비스 우대를 금지하고 동일한 상품·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비차별 요건, 지배적 플랫폼이 다양한 네트워크와 호환되도록 하고 콘텐츠·정보를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운용성 및 데이터 이동성, 지배적 플랫폼의 M&A에 대한 입증책임을 변경하여 M&A 당사자들이 해당 M&A가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고, M&A가 아닌 내부 성장과 확장을 통해 유사한 이익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 자유롭고 다양한 언론을 보호하기 위해 뉴스 퍼블리셔가 온라인플랫폼과 집단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전지대’(Safe harbor) 조항, 지배적 시장지위에 기인한 계약관행을 금지하는 ‘우월적 협상력’ 남용 금지, 지배적 플랫폼에 의존하는 개인·기업에 대한 적법 절차 보호 요건

- ② **「독점금지법」 강화** : 건강하고 활기찬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 「독점금지법」의 독점금지 목표와 그 중심성을 재확인, 경쟁제한성 추정 및 명확한 원칙(bright-line rules), 망아기준(incipiency)의 복원 및 초기경쟁자의 보호, 수직적 합병에 대한 입법강화 등 「클레이튼법」 제7조의 강화, 지배력(판매자는 시장점유율 30%, 구매자는 25%를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 남용 금지를 도입하고 독점력 전이, 약탈적 가격, 필수설비 제공 거부[지배적 플랫폼의 서비스에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입증책임없는 ‘필수설비이론’(Essential Facility Doctrine) 적용], 거래 거절, ‘끼워팔기’, 자기서비스 우대 및 제품 디자인 등 반경쟁적 행

위의 명확한 금지 등 「서먼법」 제2조의 강화, 지배력 전이와 관련해 2차 시장에서 독점화요구나 약탈적 가격설정에 대한 비용회수입증을 요구하는 기존판례의 무시 등 전반적 집행강화를 위한 추가적 조치

- ③ 「독점금지법」의 집행 부활: 독점금지법 및 그 집행에 대한 의회의 강력한 감독권 회복, ‘불공정행위(불공정경쟁)’에 대한 민사 제재금, 기타 구제를 확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시장집중에 대한 정기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더욱 엄격한 금지규정을 성문화, FTC 및 미 법무부(DOJ) 반독점국 예산을 증액, 연방 독점규제기관의 완전한 복원, 강제중재조항, 집단소송 제한, 반독점 손해에 대한 사법적 기준 등의 장애를 제거해 사적 집행 강화

- **(플랫폼경제에서의 독점규제 법령 개편)** 독점규제를 위한 법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라는 일반법적 성질을 가진 기본법만 갖추고 있어서 실효성있는 독점규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바, 일반적 공정거래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담은 ‘공정거래법’과 시장지배적 지위의 기업에 적용되는 특별법인 ‘독점금지(규제)법’으로 분리, 독점규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적 체계로 개편 필요

- **(플랫폼경제에서의 독점규제 행정 개선)** 한국의 독점규제에 대한 행정인식은 가격담합과 인상 등 산업경제 시대에 머무르고 있을 뿐 법적 규제가 없는 무상서비스 등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등 플랫폼경제 시대에 맞는 독과점 규제 행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어 플랫폼경제에 맞는 독과점 규제행정으로 전환해 경제와 산업 전반에 만연된 불공정 경쟁을 근절하고 기업간 공정경쟁을 촉진할 필요

\* (참고) 미국 바이든행정부의 「미국 경제의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2021.07.09.)<sup>8)</sup>

### 3 플랫폼경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 **(플랫폼경제에 대한 법적규제 한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B2B)는 소비자와 사업자간(B2C)의 권리의무 관계를 다루는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의 규율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거래관계의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도 계약서 제공의무, 표준계약서 등 온라인플랫폼 산업에서 잦은 분쟁 예방과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대안 규정이 부재한 상황
-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대한 반대)**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하는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고 포괄적인 규제가 되면 인터넷 산업발전에 장애요소가 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과 중복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규제기관이 민간사업자의 거래 조건에 대해 사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과잉금지

8)이 행정명령은 기술, 의약품, 농업 등 3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10여개 부처와 기관이 반경쟁적 관행을 개선하고 단속하는 72개의 이행계획을 담았다.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빅테크 기업 등이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해 해당업체의 혁신상품 개발을 중단, 경쟁을 사전 차단하는 이른바 ‘킬러 인수’를 제한하는 규칙을 만들도록 하고, 망 중립성 정책(인터넷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속도나 이용료 차별을 금지한 원칙)을 복원하게 했다. 이는 기존 기술기업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독점금지법을 빅테크 등 온라인플랫폼을 중심으로 전환하고, 미국 경제·산업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 경쟁을 근절하여 기업 간의 공정 경쟁을 확대하여 국민의 생활물가를 낮추면서도 노동자 임금 향상과 일자리 창출,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모멘텀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원칙에 위반이라고 주장

- **(온라인플랫폼 분야 규제 특별법)** 온라인플랫폼 중개업만을 규율하는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온라인판매중개업자와 판매업자의 상생적 관계를 확립할 필요성
- **(온라인플랫폼의 법적 규제대상과 범위)** 온라인플랫폼의 발전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산업에 대한 규제일변도로 할 수 없고, 온라인판매 중개업자는 불특정 다수의 판매자를 상대로 사전에 대외적으로 공개된 약관에 따라 판매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단순히 중개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판매업자는 자유롭게 온라인플랫폼의 회원 가입·탈퇴가 가능하여 다수의 온라인플랫폼에서 동시에 상품을 판매하는 등 거래의존도가 높지 않은 통상의 경우에는 온라인플랫폼 중개업자의 판매업자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어 수요지배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 측면도 고려해, 시장지배력이 없는 플랫폼기업은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을 적용
- **(온라인플랫폼 법적 규제 대상)** 온라인 플랫폼경제를 규율하는 기본법(가칭 “플랫폼경제기본법”)을 우선 제정하고, 시장지배력이 있어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의 확보 필요성이 인정되는 온라인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는 추가규제를 특별히 따로 두는 형태로 특별법 입법 방안 : ‘시장지배력이 있는 온라인플랫폼’의 범위를 특정하여 적용대상으로 하되, 규제대상이 되는 ‘불공정행위’는 가능

한 한 폭넓게 규정하고, ‘제재와 처벌’의 수준은 실효성을 갖추도록 대폭 강화하는 등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고 플랫폼경제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규제로 새로운 플랫폼기업의 출현과 혁신이 가능하도록 입법정책을 수립(대규모유통업법 등 유통시장에서의 독점방지와 불공정행위 규제 입법사례를 참고)

## 4 플랫폼노동자의 지위 및 부담 개선

- **(플랫폼노동자 보호입법 및 행정)** 플랫폼경제의 확대와 플랫폼노동자의 증가에 따라 각국은 대부분 독립계약자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플랫폼노동자를 노동자로 분류하는 입법을 통한 플랫폼노동자의 법적지위를 개선하여 플랫폼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 플랫폼노동자 관련 각국 입법 등 보호사례 : (노동자로 법적지위 부여) 플랫폼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독립성 및 자율성이 부족하므로 독립계약자인 플랫폼노동자는 근로자(노동자)로 분류(미 캘리포니아 주 Assembly Bill No.5), 플랫폼사업자-노동자 디지털 노동포털 설치, 등록의무, 노동자보호 규율(이탈리아 라치오주 플랫폼노동자 보호법), 산재보험, 직업교육, 노조결성(프랑스 ‘노동과 사회적대화의 현대화, 직업적경로 보장에관한법률 2016년 제정)

- **(플랫폼노동자 권익강화 행정)** 플랫폼노동자의 종속적 자영자라는 특수성 반영, 특별보호조치 필요, 세금과 권리의 불일치 축소, 자영업자로서의 전제 불인정(영국 굿워크플랜), 노동시간(누적 100시간) 기준 노동자와 프리랜서 구분(덴마크 단체협약 사례)

- **(플랫폼노동자의 법적 지위)** 플랫폼노동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취급되지만 플랫폼사업자와 관계에서 포괄적 지시를 받아 인적용역(프리랜서)와는 현저하게 다르고, 통상적인 사업자와 같은 ‘독립계약자’로서의 지위와 자율성이 크게 부족해 사실상 근



## 로자(노동자)로서의 특성이 강함

- **(플랫폼노동자 법적지위 조정)** 플랫폼노동자는 플랫폼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유사근로자’ ‘종속적인 사업자’의 성질을 가지므로 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아닌 ‘종속적사업자’로서 제3의 법적지위를 신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준한 노동법·세법상 지위를 부여

\* 플랫폼노동자의 법적 지위(개선안) : 종속적 사업자는 노동시간 등 일정요건 충족시 근로자로 의제(일용근로자 사례), 본인 선택에 의해 근로자 지위 포기가능, 사업자는 근로자에 준해 고용, 산재 등 보호의무, 연말정산 의무

- **(플랫폼노동자의 세법상 취급 개선)** 플랫폼노동자의 경우 현재 ‘사업자’로 취급되고 있으나, 사업을 표방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편의상 ‘인적용역’으로 사업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며<sup>9)</sup>,

9) 법인의 ‘임원’의 경우 노동법, 상법은 물론 세법상으로도 ‘근로자’의 지위가 아님에도 세법은 ‘근로소득’으로 ‘당연히’ 과세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국세청(소득세 집행기준 20-0-1)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게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2. 사용자에게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3.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4.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5.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게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6.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7.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

‘종속적 사업자’ 또는 ‘독립계약자’의 성질을 고려하는 경우 그간의 사업자와 근로자라는 2분법적 분류체계가 아닌 ‘종속적사업자’ 제3지위를 신설하여 근로자에 준해 세법상 취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플랫폼노동자의 근로자성)** 플랫폼노동자인 라이더의 경우 세법상 ‘사업자’로 취급되고 있으나 사업장과 종업원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통상적인 사업자와 달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독립적·계속반복적인 사업에 대한 표방없고 사실상 플랫폼 사업자에 ‘종속적 사업자’로서의 성질

\* 플랫폼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세무에도 적용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취급되고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등 근로소득에 대한 다양한 공제감면 적용으로 세 부담이 대폭 축소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적용 등 복지체계 수립 및 노동권 확보에 도움(관련입법 필요)

- **(플랫폼노동자의 사업자성)** 플랫폼노동자를 세무상 ‘사업자’로 취급하고 있으면서도 단순한 ‘인적용역’으로만 분류해 다른 사업자처럼 ‘산업’의 일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업종별 실제적인 소득율보다 높고 창업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 플랫폼노동자가 현재처럼 사업자로 취급되면서도 ‘인적용역’이 아닌 ‘각각의 산업’ 영역으로 전환되는 경우 소득율이 인하되고 세법상 감면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세부담이 대폭 경감

- **(플랫폼노동자의 업종코드 재편)** 라이더는 이륜차를 이용하여 음식,

물건 등을 배달하는 업종으로 ‘인적용역’ 아닌 운수업인 ‘늘찬배달업’ 유사하는 등 플랫폼노동자의 업종 및 소득산정 체계가 불합리: ❶ 인적용역이 아닌 실제수행하는 업무성질에 따른 업종분류체계 구축, ❷ 업종분류에 맞는 적절한 소득을 산정(산업으로서 경비인정, 조세감면 적용분 반영) 등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성

- **(플랫폼경제의 납세협력의무 개선)** 플랫폼사업자가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플랫폼노동자가 종속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지고있으나, 플랫폼경제의 확대로 플랫폼노동자가 급속도로 늘어나 200만명을 넘고있고 빠르게 근로자를 대체하고 있으므로 세무관서의 행정력과 플랫폼노동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세법상 근로자나 사업자임에도 간편하게 세무신고를 하고있는 보험모집인처럼 ‘연말정산’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
- **(플랫폼노동자의 납세의무)** 종속적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노동자가 현재 약 180만명에 달하는 등 플랫폼경제의 확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자와 근로자와 이분화된 과세체계에서 플랫폼노동자, 특고노동자 등의 제3의 경제주체로서 위상에 걸맞게 과세체계를 재정립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최대한 절감시킬 필요성
- **(원천징수 누락과 소득파악)** 플랫폼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소득자료가 발생하여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세를 안내할 수 있으나, 중소 플랫폼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소득신고가 누락되고 소득파악이 어려워

지는 요인을 제공

- **(플랫폼사업자의 연말정산 의무 도입)** 플랫폼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소득자는 일일이 개별적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차 필요해 많은 납세협력비용과 정부의 행정비용 발생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이 받는 사업소득처럼 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는 물론 연말정산 의무화(허용)

\* 플랫폼노동자의 연말정산 대상 : 현재의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처럼 직전 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만 대상으로 하는 등 범위를 정할 수 있음.

- **(플랫폼경제에 걸맞는 과세체계로 전환)** 세제 및 세정에서 경제주체로서 근로자(근로소득), 사업자(사업소득) 외에 추계과세하는 ‘인적용역’으로 분류했으나, 플랫폼노동자와 특고노동자에 대한 과세체계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경우 변화된 경제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세제운용 및 세정집행이 가능
- **(플랫폼경제 거래 및 소득 파악자료 확보)** 그동안 플랫폼경제 또는 특고노동자 부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 플랫폼사업자의 의무와 책임범위 등 명확한 납세제도가 구축되지 않아 전 국민 고용보험 체계 구축을 앞두고도 플랫폼사업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경제 규모와 소득과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므로, 플랫폼경제 부문의 거래 규모와 소득과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자로서의 각종 의무와 납세편의를 위한 과세체계 개편이 필요

## 5 플랫폼경제 데이터정책과 프로토콜경제 전환

- **(플랫폼 데이터요구권 부여)** 플랫폼 이용자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온라인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개인 정보이동권)을 부여(이용자의 축적된 데이터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일부 사업자의 데이터 독점화 우려도 해소)
- **(데이터경제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등 보안시스템 구축)** 플랫폼경제는 데이터공유에 대한 인식의 범위에 따라 플랫폼경제의 성장이 좌우되므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등 데이터에 대한 보안장치 등이 선결과제이므로 국가관리시스템이 구축될 필요
  - \* 글로벌 인터넷이용자(2020년1분기 기준) : 중국 8억5000만명, 인도 5억6000만명, 미국 3억1000만명, 중국 스마트폰 사용자의 모바일 결제 비중 81%
- **(정부의 디지털인프라 투자로 플랫폼기반 구축)** 플랫폼경제는 향후 주된 미래 산업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산업화시대 대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처럼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로 플랫폼경제 기반을 구축할 필요
  - \* 중국 디지털경제는 2008~2019년 정부의 선제적인 대규모 디지털인프라 투자로 연평균 20% 성장세(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규모, 한국과 6배 이상 차이)
- **(플랫폼경제에 필요한 사회시스템의 구축)** 플랫폼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과 운영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

- \* 중국사례: 바이두는 중소기업에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 알리페이는 낮은 비용으로 모바일 결제 서비스 제공

○ **(중앙집중형 플랫폼경제를 분산형 프로토콜경제로 전환)** 플랫폼경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독점과 수수료 논란 등 폐해가 확대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과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플랫폼경제가 새 경제대안모델인 ‘프로토콜 경제’로 전환 추진

- \* **프로토콜 경제** : 현재의 플랫폼경제는 플랫폼사업자가 정보와 이익을 독점하는 중앙집중형 구조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을 이용해 자영업자 등 플랫폼경제 구성원들이 프로토콜(규약)을 정하고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한 프로토콜경제는 플랫폼경제의 일방성과 폐쇄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상생경제모델

## 6 플랫폼기업의 초과수익에 대한 추가과세

○ **(플랫폼기업의 초과수익 등에 대한 추가과세)** 플랫폼기업은 정보독점과 플랫폼가입자와 노동자의 희생 등 경제력 집중의 수혜를 보았기에 플랫폼경제의 특성으로 우월적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일정한 초과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의 10~20%를 추가과세\*하는 방안을 강구(‘시장지배력’이 있고 일정한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플랫폼기업에 별도의 플랫폼세로 부과하거나 일정한 디지털서비스에 일정률의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가능) 10)

- \* **(초과이익 등에 대한 추가과세 제도)** 비사업용토지, 주택 등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10~20% 추가과세), 투자,임금(배당제외)으로 사용되지 않는 대기업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추가과세(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조특법 제100조의32)

10)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은 2020년경부터 디지털서비스 등에 2~3%의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 (첨부자료 #1) 유통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관련 현행 입법

현행 법률	목적 및 내용	규율 대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p>①<b>목적</b>: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p> <p>②<b>내용</b>: ①<b>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b>: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시정 조치, 과징금</p> <p>②<b>기업결합 제한 및 경제력집중 억제</b>: 기업결합의 제한, 주식의 취득 및 소유의 기준,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의 신고,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상호출자의 금지, 순환출자의 금지,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대규모 기업내부거래의 의결 및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 기업결합의 신고, 기업결합신고 절차 등의 공개, 주식수 현황등에 관한 신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계열사의 편입 및 제외, 계열사의 편입 및 통지일의 의제,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탈법행위의 금지, 시정조치 등, 과징금, 이행강제금, 시정조치의 이행확보</p> <p>③<b>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b>: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공공부문 입찰관련 공동행위의 방지를 위한 조치, 시정조치, 과징금,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p> <p>④<b>불공정행위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b>: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등의 금지, 보복조치의 금지</p> <p>⑤<b>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제한</b>: 재판매가격</p>	<p>①<b>1.시장지배적사업자</b> :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시장지배적사업자’ 판단 시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p> <p>①<b>2.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b>: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 이하 사업자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다만, 이경우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자 제외)인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 사업자는 제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p> <p>②<b>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b> :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p>

	<p>유지행위의 제한, 재판매 가격유지의 수정, 시정조치, 과징금</p> <p><b>⑥전담기구:</b>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업무,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회의의 구분, 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위원장, 위원의 임기, 위원의 신분보장, 정치운동 금지, 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 심리·의결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심판정의 질서유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의결서 작성 및 경정, 법위반행위의 판단시점, 사무처 설치, 조직에 관한 규정</p> <p><b>⑦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b>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구성, 협의회의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정 신청, 조정, 협의회 조직·운영</p> <p><b>⑧조사등의 절차:</b> 위반행위의 인지·신고, 위반행위의 조사 등, 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등의 연기신청, 이행강제금, 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동의의결, 동의의결의 절차, 동의의결의 취소, 이행강제금,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자료열람 요구, 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이의신청,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문서의 송달, 소제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p> <p><b>⑨과징금 부과 및 징수:</b> 과징금 부과, 과징금의 연대납세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과징금 환급가산금, 결손처분</p> <p><b>⑩손해배상:</b> 배상책임, 기록송부, 손해액인정</p> <p><b>⑪적용제외:</b>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일정한 조합의 행위</p> <p><b>⑫보칙:</b> 비밀엄수의 의무, 경쟁제한적 법률제정의 협의, 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포상금의 지급, 포상금의 환수,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p> <p><b>⑬벌칙:</b> 벌칙, 과태료, 양벌규정, 고발</p>	
<p><b>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b></p>	<p><b>①목적:</b>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p>	<p><b>①-1.대규모유통업자:</b> 소비자사용 상품을 다수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맹본부’ 포함) 중 다음 ①, ② 중 어느 하나</p>



<p><b>'12.01. 01.제정시행)</b></p>	<p><b>②내용: 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b> 신의성실의 원칙,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상품수령거부 및 지체 금지, 상품의 반품금지,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등, 배타적 거래 강요금지, 경영정보 제공요구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 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매장설비비용의 보상,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보복행위의 금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협약 체결</p> <p><b>②분쟁의 조정 등 :</b>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협의회의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협의회의 조정사항, 조정의 신청 등, 조정 등, 조정조서의 작성고 효력, 협의회의 조직·운영 등</p> <p><b>③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b> 위반행위의 조사, 포상금의 지급, 포상금의 환수, 서면실태조사, 처분대상의 제한, 시정명령, 시정권고, 공탁, 과징금, 손해배상책임,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준용</p> <p><b>④벌칙:</b>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고발</p>	<p>인 자: ①직전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기업회계기준상 순매출액 수익인식 사업자는 총매출액, 가맹본부의 소매업매출액과 가맹점사업자 판매상품매출액 합산금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년미만시 12개월 환산액)이 <b>1천억원 이상자</b>, ② 매장면적(매장 바닥면적에 95%곱해 산출된 면적)합계가 3천㎡이상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p> <p><b>①2.대규모유통업자 의제:</b> 매장임대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상품매출액 연동임차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 수취사업자 중 다음 어느 하나인 자 : ①직전사업연도에 자신이 임대매장 발생한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자, ②자신이 임대매장 면적합계 3천㎡이상자</p> <p><b>②납품업자:</b> 거래형태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공급(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공급하는 경우 포함)하는 자</p> <p><b>③매장임차인:</b>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매장일부를 임차하여 소비자 사용 상품판매에 사용하고 대가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하는 자</p>
<p><b>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전자상거래법, 2002.07.01. 제정시행)</b></p>	<p><b>①목적:</b>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p> <p><b>②내용</b></p> <p><b>①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b> 전자문서의 활용, 거래기록의 보존, 조작실수 등의 방지,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 배송사업자의 협력,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사이버몰의 운영,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통신판매업자 신고, 신원 및 거래조건 정보 제공, 청약확인, 재화·용역의 공급, 청약철회,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통신판매중개</p>	<p><b>①전자상거래:</b>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 방법(=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에 의한 상행위(商行為)</p> <p><b>②통신판매:</b> 우편·전기통신, 그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포함) 판매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청약받아 재화나 용역을 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에서 제외)</p>

	<p>업자의 의무와 책임,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 책임, 금지행위</p> <p><b>②소비자권익의 보호:</b>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구매권유광고시 준수사항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단체 지원</p> <p><b>③조사 및 감독:</b> 위반행위조사, 공개정보 검색, 위법행위 정보공개, 평가·인증사업 공정화, 보고 및 감독</p> <p><b>④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b>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시정조치, 임시중지명령, 소비자피해 분쟁조정 요청, 과징금</p> <p><b>⑤보칙:</b>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전속관할, 사업자단체의 등록, 권한의 위임·위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준용</p> <p><b>⑥벌칙:</b>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p>	
--	--	--

## \* (첨부자료 #2) EU의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DMA) 주요내용

### □ 「디지털시장법」 개요

- (목적)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후규제에 대한 한계를 인식, 경쟁제한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전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 (적용대상) 연매출, 이용자 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하여 의무부과 대상으로 보고 있음

\* ‘게이트키퍼’ : 다음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플랫폼기업 ① 온라인 검색·SNS 등 코어 서비스 운영, ② 유럽내 연 매출액 65억 유로 이상 또는 평균 시가총액 650억 유로 이상, ③ 1년간 월평균 이용자 수 4천5백만 이상 및 상업적 이용자수 연간 1만개 이상, ④ 견고하고 지속적인 지위 확보

### □ 「디지털시장법」 주요 내용

#### ○ ‘게이트키퍼’가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제5조)

- ① 자사와 타사 플랫폼에서 발생한 개인정보를 결합하지 말 것, ② 상업적 이용자가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한 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타사 플랫폼에서 상품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상업적 이용자가 자사 플랫폼에서 획득한 이용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홍보·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상업적 이용자가 자사 플랫폼을 신고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 것, ⑤ 상업적 이용자에게 자사의 특정 서비스 사용을 요구하지 말 것, ⑥ 상업적 이용자, 사용자가 자사의 특정 서비스에 가입·등록하기 위해 자사의 다른 서비스에 가입·등록하도록 요구하지 말 것, ⑦ 광고주와 출판업자가 지불하는 비용, 플랫폼이 출판업자에 지급하는 보수 정보를 제공할 것

- 의무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부과된 세부적 의무(제6조) : ① 상업적 이용자를 통해 얻은 정보를 상업적 이용자와 경쟁하는데 사용하지 말 것, ② 소비자가 플랫폼의 선택재 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소비자가 자사

플랫폼의 운영시스템을 사용하는 제3의 앱·스토어를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자사의 상품·서비스를 타사에 비해 노출순서 상 우대하지 말 것, ⑤ 소비자가 자사 플랫폼의 운영시스템을 사용하는 앱·서비스로 이동하거나 동시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말 것, ⑥ 상업적 이용자 등에게 자사의 운영시스템 및 HW·SW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것, ⑦ 광고주·출판업자에게 광고효과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⑧ 상업적 이용자 및 소비자에게 데이터 이동 수단을 제공할 것, ⑨ 상업적 이용자 등이 데이터를 무료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⑩ 제3의 온라인 검색엔진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랭킹, 검색 등에 대한 데이터 접근을 허용할 것, ⑪ 상업적 이용자의 앱스토어에 대한 접근을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조건 하에 허용할 것

## □ 법집행 관련

- (과징금) 의무 불이행 시 전세계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 부과가능
- (시정조치) 18개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5년간 3차례 이상)할 경우, 특정 사업의 매각 등에 관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집행기관)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집행위가 직접 DMA 집행권한을 행사하며,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해 시장조사 권한을 가짐

## \* (첨부자료 #3) EU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DSA) 주요내용

### □ 「디지털서비스법」 개요

- (목적)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디지털 공간을 형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중개업체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규정
- (적용대상) EU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 중개업체: ①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하는 중개서비스, ② 클라우드 및 웹호스팅 등 호스팅서비스, ③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플랫폼, ④ 초대형 온라인플랫폼 (유럽소비자 4억5천만명 중 10% 이상이 활동)

※ EU 외부에서 설립된 업체도 포함, 이 경우 EU 내 법적 대리기관을 지정해야 함

### □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른 중개업체 주요 의무사항 : 온라인 중개업체의 능력 및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구분

- ① 4가지 유형 중개업체 모두에게 부과되는 사항 : 중개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관의 적용과 집행 등을 포함한 연례 보고서 제출 의무, 이용자의 기본권을 고려한 서비스 약관 마련 및 약관 공개, 감독기관 등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단일창구 마련 등
- ② 네트워크 인프라 중개업체를 제외하고 부과되는 사항 : 불법 콘텐츠에 관한 통지 및 삭제 등에 관한 조치를 취하되, 게시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보장해야 함
- ③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만 부과되는 추가적 의무 : 사용자가 불법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확보하되, 불법콘텐츠 신고 남용 방지를 위한 이의제기 등의 방안 마련, 불법콘텐츠에 대한 '신뢰가능한 신고자'와 협력체계 구축, 온라인 시장에서 불법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식별 지원, 온라인 광고 노출과 관련하여 광고주, 광고의 노출 기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 ④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만 부과되는 추가적 의무 : 플랫폼이 불법적 내용을

전파하거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시민의 의사결정 등 공공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에 대해 연 1회 이상 분석 및 평가를 실시, 상기 분석 및 평가 결과 구조적 위험이 발견되면, 약관 개정, 내부 감독 강화, 신뢰할 수 있는 외부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조치, 플랫폼 자체 비용으로 동법 준수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 감사 보고서에 따른 권고안 이행, 추천 시스템에 사용되는 중요매개 변수를 공개하며, 이용자에게 추천 시스템에 대한 선택권 제공, EU 집행위 등이 동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의 의무 부과

## □ 법집행 관련

- (감독구조) 회원국 별로 디지털서비스 담당기관을 지정하여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EU 집행위가 직접 감독
- (제재수준) 법 위반시 연소득 또는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 부과, 지속적 법위반시 일평균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과태료의 주기적 부과 가능

###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른 온라인플랫폼 중개업체의 의무

구분	중개 서비스	호스팅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투명성 보고(Transparency reporting)	√	√	√	√
기본권을 고려한 서비스 약관 (Requirements on terms of service due account of fundamental rights)	√	√	√	√
당국과의 협력(Cooperation with national authorities following orders)	√	√	√	√
연락처 및 법적 대리(필요 시)(Points of contact and, where necessary, legal representative)	√	√	√	√
통지 및 조치,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Notice and action and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to users)		√	√	√
이의 및 구제 메커니즘과 법정 밖 분쟁 해결(Complaint and redress mechanism and out of court dispute settlement)			√	√
신뢰가능한 신고자(Trusted flaggers)			√	√
불법콘텐츠 및 신고남용에 대한 조치(Measures against abusive notices and counter-notices)			√	√
제3자 공급업체의 자격 점검 (Vetting credentials of third party suppliers ("KYBC"(Know your business customer))			√	√
사용자 대상 온라인 광고의 투명성 (User-facing transparency of online advertising)			√	√

구분	중개 서비스	호스팅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범죄 행위 보고 (Reporting criminal offences)			√	√
위험관리 의무 및 규정준수 책임자 (Risk management obligations and compliance officer)				√
외부 위험감사 및 공공 책임성 (External risk auditing and public accountability)				√
추천시스템의 투명성 및 정보 액세스를 위한 사용자 선택 (Transparency of recommender systems and user choice for access to information)				√
당국 및 조사자와의 데이터 공유 (Data sharing with authorities and researchers)				√
행동 강령 (Codes of conduct)				√
위기 대응 협력 (Crisis response cooperation)				√



**\* (첨부자료 #4) 21대 국회 플랫폼경제 관련 법안(법안별 취지 및 주요내용)**

법안	취지	주요내용
온라인플랫폼 통신 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관한법률안 (‘20.07.13.송갑석의원등 10인)	①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 방지와 통신판매 중개에서 판매업자를 보호, ②온라인플랫폼 운영의 투명성 제고, ③공정한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 중개거래질서 확립→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와 온라인판매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 균형발전	①검색·배열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등을 공개, 주요원칙 등을 준수 의무, ②온라인중개계약 체결 시 온라인판매업자에게 서면계약서 제공, ③수수료부과기준에 따르거나 판매촉진행사 실시할 때 온라인판매업자를 차별행위 등 금지, ④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범위반사실 조사권, ⑤법 위반한 온라인판매중개업자 등에 시정명령, 과징금·과태료 부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20.12.11, 전혜숙의원등 12인)	ICT 생태계에서 플랫폼의 위상과 영향력이 급격하게 증대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자의 업무와 일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플랫폼의 영향력과 이용자의 의존도는 5G 서비스가 확산되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융복합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전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이와 함께 플랫폼의 공정 경쟁 또는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가 다양화·다원화되고 있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규제체계는 네트워크 위주의 협소한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여 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 용어를 정의하고 적용범위를 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1) 매출액,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금액, 이용자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만 이 법을 적용함. 2) 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에 매출액,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금액, 이용자수, 이용집중도, 거래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만 강화된 의무 및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불만 접수채널 확보, 내부 불만 처리지침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6조). 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한·중단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그 내용 및 구체적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안 제8조). 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환불사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의 세부 정산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정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9조). 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p>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0조).</p> <p>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콘텐츠 등의 노출 방식 및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을 공개하여야 함(안 제11조).</p> <p>사.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지연·제한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3조).</p> <p>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이용약관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14조).</p> <p>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제공하거나 허위·과장·기만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5조).</p> <p>차. 이용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이터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16조).</p> <p>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결제 및 환불과 관련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함(안 제17조).</p> <p>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플랫폼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p> <p>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안 제26조, 제29조, 제33조 및 제35조).</p> <p>하.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동의를결을 하여 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안 제31조).</p>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김병욱의원등12인, 2021.1.25)	<p>온라인 쇼핑시장의 급성장 추세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폭발적 증가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자와 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음.</p> <p>온라인 플랫폼이 디지털 경제의 혁신을</p>	<p>가. 이 법의 적용대상 및 주요개념인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수수료, 광고비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p> <p>나. 이 법의 적용범위는 플랫폼 사업자 중 매출액</p>

<p>이끌어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되고 소상공인의 플랫폼 유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p> <p>그런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직접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중개서비스업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정거래 분야의 일반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도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계약서 작성·교부와 표준계약서 마련, 상생협약 등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근거규정은 없는 상태인 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임.</p> <p>최근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주요 정책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유럽연합 및 일본 등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 분야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관련 입법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됨.</p> <p>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 및 분쟁당사자 간의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담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p>	<p>(직전 사업연도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수료 수입이 1백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또는 중개거래 금액(직전 사업연도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 상품·용역 판매가액 합계액이 1천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로 함(안 제3조).</p> <p>다.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하는 증권거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하는 금융상품거래 등에는 적용하지 않음(안 제4조).</p> <p>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전적인 분쟁예방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필수 기재사항)하도록 하였으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해당 약관과 동의사실을 언제든지 열람·저장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계약서 서면 제공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7조 및 제9조).</p> <p>마.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검색·배열 순위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을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여야 함(안 제8조).</p> <p>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하는 경우 사전통지 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p> <p>사. 기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금지 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여 부당한 이용사업자 차별행위,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제공 제한·중단·거절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함(안 제12조).</p> <p>아. 그 외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행위,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 경영정보의 제공 요구 행위 등을 별도로 금지행위로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p> <p>자. 건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및 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간 불공정한 내</p>
---	---

		<p>용의 중개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계약서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p> <p>차.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19조).</p> <p>카.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 자단체가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20조).</p> <p>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실효성 있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함(안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p> <p>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30조 및 제31조).</p> <p>하.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안 제32조).</p> <p>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34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 등).</p> <p>너.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자발적 시정방안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함(안 제36조).</p> <p>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법 위반행위 또는 그 우려에 따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함(안 제39조).</p>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10인, 2021.01.27)	<p>온라인 유통시장은 급성장 추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폭발적 증가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입점업체 거래 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습니다.</p> <p>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들의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p>	<p>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중개거래 계약서의 서면 발급의무를 부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표준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안 제7조).</p> <p>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중개계약 약관을 등록하게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약관 등록이 취소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거</p>

	<p>자가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판매가격 또는 경영상대방 등 경영활동을 간섭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입점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p> <p>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약관 등록 및 공개제도, 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분쟁의 사전예방 및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규정이 없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p> <p>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절차규정, 금지행위 규정 및 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담은 법률을 제정하려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권리구제의 편의와 신속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지사에게 감독·분쟁조정권도 부여하고자 합니다.</p>	<p>래의 투명성을 확보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p> <p>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 구성권 부여하고, 사업자단체에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부여함(안 제12조).</p> <p>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이용사업자에 대한 중개계약내용 변경 및 중개서비스 제한 등의 사전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중개계약의 내용 변경 및 계약해지의 효력은 부인함(안 제13조 및 제14조).</p> <p>마.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정하여 금지함(안 제15조).</p> <p>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채화등 판매대금을 소비자의 구매확정일 또는 결제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안 제16조).</p> <p>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 신고,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7조).</p> <p>아.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적으로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8조).</p> <p>자.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원 협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안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p> <p>차.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31조).</p> <p>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p> <p>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불공정행위의 해소,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 입점업체 피해구제 및 예방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35조).</p>
--	--	--

		<p>파.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 서면교부 및 기명날인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법 위반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함(안 제37조 및 제38조).</p>
<p>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정부, 2021.01.28.)</p>	<p>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제공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의 공정거래제도로는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p>	<p><b>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등(안 제6조)</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중개거래계약 기간,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함.</li> <li>2)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li> </ol> <p><b>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사전통지 의무(안 제7조)</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그 이유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중개거래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함.</li> <li>2)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중지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이유 및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li> </ol> <p><b>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안 제9조)</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li> <li>2)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그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온라인</li> </ol>

		<p>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구조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p> <p><b>라.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안 제12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해당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li> <li>2) 분쟁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분쟁사항에 관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협의회는 그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 경위 또는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하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li> <li>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사항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분쟁당사자는 합의사항의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li> </ol> <p><b>마.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조사 및 처리(안 제20조, 제22조, 제24조 및 제26조)</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함.</li> <li>2)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서면교부 및 기명날인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li> <li>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거래 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중개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li> </ol> <p><b>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안 제29조)</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li> </ol>
--	--	---



		<p>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p> <p>2)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 내용,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 공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및 영업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p> <p><b>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안 제30조)</b></p> <p>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p> <p>2) 법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해당 중개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p>
<p>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배진교의원 등 10인, 2021.03.08)</p>	<p>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추세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폭발적 증가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자와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 의존도는 심화</p> <p>온라인 플랫폼은 직접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중개사업자로서 현행법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p> <p>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 및 분쟁당사자 간의 원활한 분쟁 해결에 대한 제도적 장치 등을 담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p>	<p>가. 이 법의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사업자, 수수료 및 광고비를 각각 정의함(안 제2조).</p> <p>나. 이 법의 적용범위를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을 통한 매출액이 1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와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 등의 판매가액 합계액이 1천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로 함(안 제3조).</p> <p>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중개거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광고비의 주요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검색·배열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 수수료 또는 광고비가 검색·배열순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재한 중개거래계약을 교부하도록 하되, 공개로 인해 영업비밀이 침해되거나 다른 법령의 준수 등에 의하여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p>

		<p>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중개거래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 이전 계약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조).</p> <p>마.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재화 등의 검색배열 순위 조작·변경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차별하는 행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그 사용 여부에 따라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차별하는 행위,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의 조치를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9조, 제23조 및 제27조).</p> <p>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의 구성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2조).</p> <p>사.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하지 않는 한편, 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38조).</p>
<p>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성일 종의원 등 11인, 2021.03.15.)</p>	<p>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계약서 교부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다만, 혁신하는 기술 및 서비스, 글로벌 경쟁상황을 고려해서, 계약서에 기재될 구체적인 항목과 내용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계약서의 수립 및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p> <p>또한,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p>	<p>○ <b>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 계약서 교부의무 등(안 제7조 및 제8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중개서비스 이용거래 계약서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함.</li> <li>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개서비스 이용거래 계약 기간,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li> </ul> <p>○ <b>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사전통지 의무(안 제9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그 이유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li> <li>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중지 예정일의 7일 전까지</li> </ul>

		<p>그 이유 및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p> <p>○ <b>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안 제10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li> <li>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그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 시장의 구조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li> </ul> <p>○ <b>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안 제13조 및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해당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li> <li>분쟁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분쟁사항에 관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협의회는 그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 경위 또는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하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li> <li>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사항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분쟁당사자는 합의사항의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li> </ul> <p>○ <b>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조사 및 처리(안 제21조, 제23조, 제25조 및 제27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함.</li> <li>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li> </ul>
--	--	--

		<p>이용거래계약서 서면교부 및 기명날인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거래 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중개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li> </ul> <p>○ <b>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안 제30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li> <li>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 공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및 영업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li> </ul> <p>○ <b>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안 제31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li> <li>법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해당 중개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li> </ul>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장철민의원 등 20인, 2021.03.18.)	<p>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2020년 조사에서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나 일감을 구하는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 명으로 취업자의 7.4%에 해당하며, 이 중에서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협의의 종사자는 22만 명으로 취업자의 0.9%에 해당하여 플랫폼 일자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p>	<p>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이 법이 유리한 경우 이 법을 적용함.</li> <li>2) 플랫폼 종사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li> </ol>

	<p>플랫폼 일자리는 번역, 데이터 라벨링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본인이 업무수행여부와 일하는 시간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지만, 가격결정권의 유무, 성과평가 여부 등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p> <p>이러한 플랫폼 일자리는 자율성이 극대화되고 비공식 노동이 공식화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개선이 필요한 측면도 있어 플랫폼 종사자 보호가 시급한 상황임</p> <p>이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보호하고,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계약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함. 이를 위해 플랫폼 운영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의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p>	<p>법률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이 법이 유리한 경우 이 법을 적용함</p> <p>3) 이 법 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적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음.</p> <p>나. 플랫폼 운영자가 실질적으로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방식 또는 보수의 기준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3장의 적용에 있어 해당 플랫폼 운영자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로 봄(안 제4조).</p> <p>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계약 및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p> <p>1)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종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이용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플랫폼 이용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10일, 해지하는 경우 15일 이전에 그 내용·이유 및 시기 등을 서면으로 플랫폼 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p> <p>2)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종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플랫폼 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7조).</p> <p>3)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종사자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제공하여야 함(안 제8조).</p> <p>4)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공제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플랫폼 종사자 공제회를 설립하여야 함(안 제9조 및 제10조).</p> <p>라.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안 제13조부터 제28조까지)</p> <p>1)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플랫폼 종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하고, 계약서를 서면으로 플랫폼 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함(안 제13조 및 제14조).</p> <p>2)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계약에서 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나 계약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을 수행할 것을 플</p>
--	---	---

		<p>랫폼 종사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을 플랫폼 종사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됨(안 제15조 및 제16조).</p> <p>3)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플랫폼 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적정하게 결정하고, 보수의 지급기준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플랫폼 종사자에게 적어도 10일 이전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안 제17조).</p> <p>4)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적어도 15일 이전에 그 내용·이유 및 시기 등을 서면으로 플랫폼 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함(안 제18조).</p> <p>5)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플랫폼 종사자에게 차별적 처우, 이 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조치, 폭언·폭행·성희롱 및 괴롭힘,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개인정보 및 사생활 등을 보호하여야 함(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p> <p>6)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플랫폼 종사자가 사회보험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안 제26조).</p> <p>7)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플랫폼 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여야 하며, 플랫폼 종사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휴식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27조).</p> <p>마. 정부의 책무(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p> <p>1)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의 범위에서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하고, 3년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안 제29조 및 제30조).</p> <p>2) 정부는 표준계약서의 개발 및 보급을 하여야 하며, 플랫폼 운영자의 공제사업 지원, 플랫폼 종사자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보험 적용 관련 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31조 및 제32조).</p> <p>바. 고용노동부장관은 플랫폼 운영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p> <p>사.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법의 주요 사항을 위반</p>
--	--	--

		한 플랫폼 운영자 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6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2021.04.20.)	<p>온라인 플랫폼은 이용 소비자의 선호가 몇 개의 온라인 플랫폼에 집중되어 독과점화 되는 경향이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우월한 지위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업체나 외식업 자영업자 등 온라인 플랫폼을 사업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사업자와의 중개거래에서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함.</p> <p>또한, EU집행위원회가 2017년 Google이 자사의 비교검색 사이트인 Google Shopping을 경쟁사보다 우대하여 배치한 행위에 대하여 약 24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에 상품이 노출되는 순위(ranking)를 결정짓는 기준이 불투명하여 이용사업자나 소비자들은 노출순위 결정 기준의 공개와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p> <p>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경제가 확대되면서 중소 판매업자나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사업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투명성은 개선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고 이용사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내부 고충처리절차나 외부 분쟁조정 시스템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고, 이용사업자 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중개거래 조건의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전국가맹점협의회와 음식배달 온라인 플랫폼사이에서는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이 체결되기도 하였음.</p> <p>한편 EU이사회와 EU의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제정하였고, 동 규칙은 2020. 7. 12.부터 시행되는 등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가 만들어지는 추세임.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사업자들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 부여, 신속한 고충처리와 분쟁조정절차, 피해구제를 위한 단체소송 제도 등을 도입하고자 함.</p>	<p>가. 이 법은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와 온라인 중개서비스 이용사업자의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p> <p>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중개서비스업자와 이용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수수료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p> <p>다.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와 사업자는 각자의 거래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안 제5조).</p> <p>라.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사업자와 체결하는 중개계약에 필요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p> <p>마. 중개계약에는 이용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화의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방식 및 노출 순서의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0호)과 이용사업자 및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 및 그러한 정보의 총합 형태로 형성된 정보를 이용사업자가 제공 받을 수 있는 여부,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 제공 방식 및 조건 등에 관한 내용(안 제6조제12호)이 포함되어야 함.</p> <p>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중개서비스 공급을 제한, 중단, 해지하는 경우 그 내용과 이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8조).</p> <p>사.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 중개서비스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9조).</p> <p>아.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사업자들이 거래조건의 개선과 거래관계의 공정화를 위해 이용사업자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교섭 요청권을 부여함(제10조).</p> <p>자.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사업자의 중개거래상의 고충을 처리하는 고충처리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의2).</p> <p>차. 이용사업자가 이용사업자단체를 구성·가입·활동하거나 교섭 요청을 한 것을 이유로 한 보복행위 등을 금지함(안 제11조).</p> <p>카.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와 사업자 간에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p> <p>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명령, 시정권고, 동의의결, 과</p>



		<p>징금 부과 등의 행정적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p> <p>파.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법원이 손해와 손해액의 증명을 위해 자료 제출 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p> <p>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이 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를 위반하여 이용사업자의 사업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중개계약 위반 행위 및 변경,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 불공정행위 및 보복행위의 금지,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소제기를 할 수 있는 단체와 소송허가요건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p>
--	--	--